

주요 성과 살펴보니...

지난 8년간 중무행정 분야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 불교중흥을 위한 지속적인 중무혁신을 이뤄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선정된 중점 정책과제 실행을 위해 집행부, 중앙종회, 본 말사가 합심하여 꾸준히 추진했다. 중요한 성과를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자.

수십년간 과제로 남아있던 상당한 문제들이 지난 8년간 해결됐다. 승려복지제도 시행, 범인관리를 처음으로 시작한 것, 토지 처분금을 활용한 신도시 종교 용지 확보, 해외특별교구 출범, 육군 훈련소 군법당 신축, 해외 구호 사업 전개와 복지시설 건립, 총본산 성역화와 10·27 법난 기념관 건립 추진, 세종과 위례신도시 종교 용지 확보 등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종단 차원의 대형 목적사업들을 시행해왔다.

또한 내부적으로 국민과 신도들의 신뢰를 받는 투명한 중무행정을 위한 각종 제도적 쇄신도 이뤄냈다. 2011년 자성과 쇄신결사운동으로 ‘수행결사’ ‘문화결사’ ‘생명결사’ ‘나눔결사’ ‘평화결사’의 5대 결사 운동 추진을 통해 종단 각 영역에서 혁신을 추진했다. 그 결과 ‘사찰예산 회계법’ 제정, ‘사찰운영위원회법’ 개정 등 각종 쇄신입법을 마련했다. 주요 사찰 재정공개에 이은 분담금 개선을 통한 사찰 재정합리화와 형평성 마련 등 수많은 성과를 거뒀다.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한글 의례의식을 제정하고 한글 반야심경, 한글 행선축원, 조직 중송, 삼귀의, 사홍서원 등을 제정해 전국 사찰과 각종 불교 행사에서 적용하고 있다. 승가교육 현대화를 추구하여 동영상 강의, 교재 및 강의 교안 현대화를 진행했고 염불 영어 설명대회 등을 개최해 학인들이 현대인들과 보다 쉽게 교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현대화하고 있다. 법계 제도를 중심으로 한 승가고시 제도가 정착됐다. 1급 승가고시가 처음 치러졌고 법계별 연수교육이 정착되어 출가와 수행단계를 중심으로 한 교단 내 질서를 확립해가고 있다.

○ 승려복지제도 실시

승려복지제도도 마련했다. 종단은 과거 종단 소속이면서 수행생활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제공하는데 부족했다. 그래서 의류비와 노후는 책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종단 안팎에서 꾸준히 나왔다. 주지 인사에 민감한 것도 건강 노후 걱정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종단이 모두 책임지면 굳이 힘들어 주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론도 만만찮았다. 삭발염의하고 열심히 수행 정진 기도하면 숙인들 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는데 젊을 적 수행을 게을리 해서 제 노후 하나 못 챙긴다는 반대의견이 거셌다. 수십년도 더 된 오랜 숙제가 이번 집행부에서 풀렸다. 2011년 승려복지법이 제정되고 2014년 전면 개정됐다. 종단 스님들의 입원 진료비, 요양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급한다. 올 1월부터 본격 개시됐다. 지금까지 4억여원이 지급됐다. 종단 지원 수익 사업과 함께 스님 사찰 재가불자들의 승보공양 후원으로 재원을 충당한다. 교구본사와 연계, 요양병원 설립 등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종단이 적어도 건강만은 책임지는 행정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총본산 성역화 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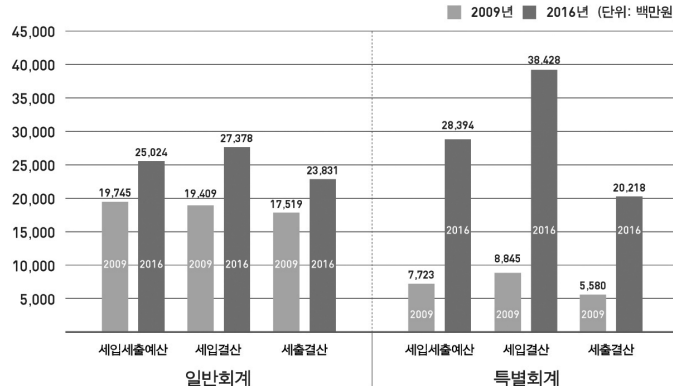
총본산 성역화 불사는 지리 역사, 문화적 위상이 높은 서울 도심의 경복궁 광화문 종로 인사동을 견지동과 연계하여 전통문화벨트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근거, ‘10·27 법난기념관 건립’ 사업과 서울특별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조계사 주변 정비 사업’이 불사 지역이다. 불교계의 명예 회복과 낙후된 도심환경을 개선해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조성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중요한 불사다. 총본산은 조선 500년 역불정맥에서 벗어나 불교근대화, 민족불교 보존, 불교계 역량 결집 등을 내건 불자들의 염원이 모여 100여년 전 건립됐다. 해방 후에는 정화의 산실로 1970년대는 불교 현대화의 중심지로 한국불교를 선도하고 결집해온 총본산 주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대불사가 이번 집행부에서 시작됐다. 총사임비 1670억원에 10·27 법난 기념관이 들어오고 역사문화관광 자원으로 조계사 주변을 정비한다. 불사가 완성되면 총무원과 조계사가 위치한 우정국로변으로 전통한옥 건축물이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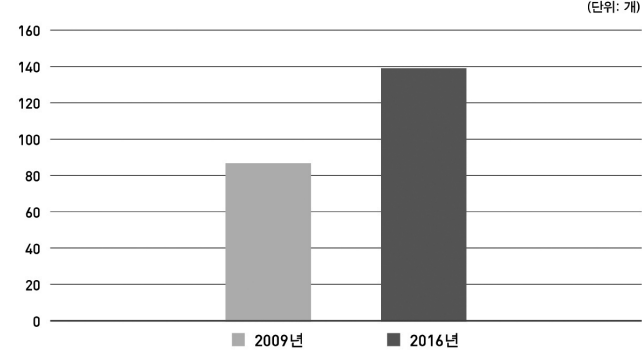
지난 8년간 집행부는 종단 내부적으로는 5대 결사를 내걸고 수많은 쇄신 입법을 처리했으며 정부와 관계에서는 민족유산 보호, 종단의 권리 확보, 사찰 재산과 문화보호를 위한 팔목할 만한 결실을 맺었다. 사진은 지난 8월25일 성보 보존에 획기적 전환을 가져온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기공식 모습.

집행부 중앙종회 교구본사 합심 종단 공동체 발전 이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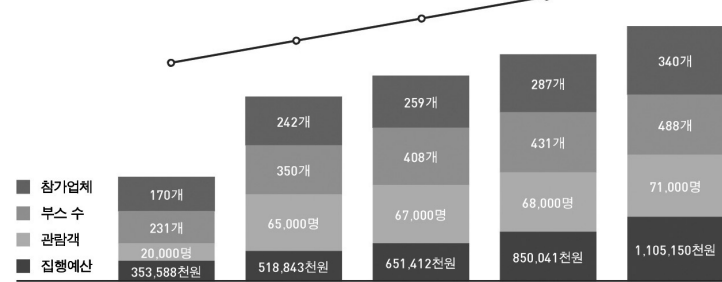
■ 중앙종무기관 예결산



■ 신도전문교육기관(불교대학) 현황



■ 국제불교박람회



되어 서울의 전통문화 명소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서울시 불교계의 긴밀한 협조로 진행되는 이 불사는 종단의 안정된 기반과 지도력이 없다면 엄두조차 내지 못할 불사다. 사업부지가 소유주들과 협의가 되지 않아 2022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불자들의 계속된 지원을 필요로 한다.

○ 사찰재산 보호위한 국가법령 제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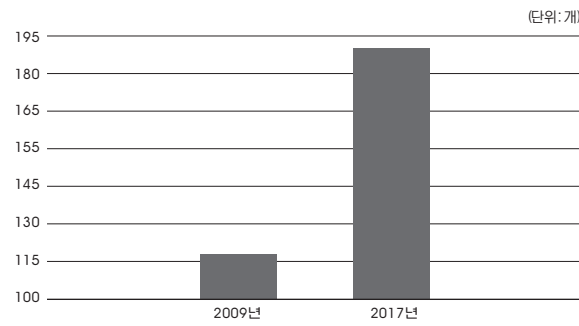
종단은 제33, 34대 집행부 8년간 높아진 종단 위상을 기반으로 사찰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도시공원·산림 관계 규제법령 등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개선된 내용으로 개정됐다. 또한, 농지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개발 시 부과되는 부담금에 관한 사항들이 개선되어 사찰 재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되었다. 아울러, 10·27법난특별법의 법안 시효가 삭제되어 영구적인 법률상의 지위를 가지게 됨으로써 종단의 핵심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 신도시 종교용지 확보 시설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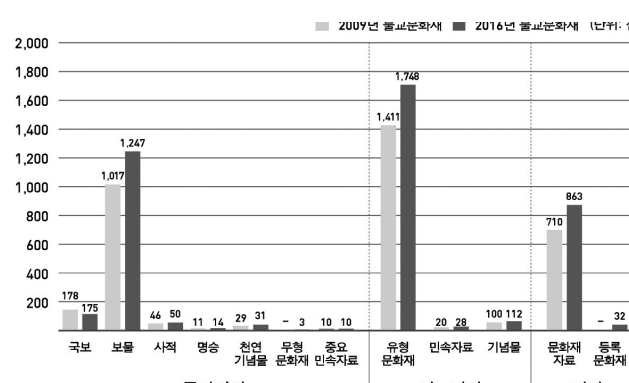
행정수도 세종시에 조계종 대표사찰 건립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조계종 거점사찰로 중앙부처와 원활한 행정공유를 위한 공간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 때부터 신도시 포교의 중요성이 종단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뒤이어 위례신도시의 호국사자사, 창원 39사단 군법당 등 군

8년간 가장 많은 법률 제개정
불교중흥 위한 중무혁신 지속
국민 신도 신뢰 회복 제도 개혁
중무행정 체계화 현대화 마련
수십년간 과제들 상당수 해결

■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



■ 불교관련 지정 문화재 현황



의가 공개 형식과 범위 공개 방법 등을 정했다. 공개범위는 사찰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불사, 템플스테이, 적립금 포함)로 나눠 ‘관’ 중심으로 공개됐다. 직영 및 특별분담사찰을 포함한 4등급(29억) 이상 사찰 재정공개에 이어 2차로 9등급(20억)이상으로 범위를 넓혔다. 현재 종단 홈페이지에는 서울 조계사를 비롯해 봉은사, 강화 보문사, 경산 선문사 등 주요 사찰 재정이 나와있다. 재정공개는 종교 단체 중 가장 선진적이며 투명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 종단 쇄신위한 법령 제개정

지난 2009년부터 2017년 까지 8년간의 중무령 제 개정 수는 144건이다. 이는 1994년 개혁회의 외 정상적인 집행부 시절 가장 많은 성과다. 그 내용도 투명한 재정 등 종단 혁신과 사부대중이 공동으로 사찰 운영에 참여하는 대중공동체 구현 등 획기적인 내용들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집행부 직원들이 밤새워 안을 마련하고 총무원장 스님등 집행부 교역자들이 중앙종회위원을 만나 개별적으로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고 대중공사 본사주지회의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등 대중과 함께 하는 노력을 펼친 결과다. 이같은 획기적인 내용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 대화, 설득 등 중무원들의 전문성과 열정이 다함께 작용해야함을 쇄신입법은 보여준다.

2012년 제190회 중앙종회에서는 그동안 논란으로 남았던 사찰 재정 투명화 혁신을 위한 중요한 법안 4개가 통과됐다.

‘사찰예산회계법’은 사찰에 적용되는 예산회계 원칙 절차를 통일하는 법안이다. 중앙총무기관 중심의 예산회계법을 사찰로 확산해 통일 회계를 마련한데 그 의의가 있다. 사찰예산 사용처를 반드시 명시하고 차입금은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무회의로 의결한 사찰은 전문 회계사를 통한 감사를 시행하는 등 사찰회계의 근대화 투명화를 담았다. 이밖에 신용카드 도입, 경리회계 담당의 보증보험 가입, 사찰운영의 의결을 거친 세입세출 마련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사찰운영위원회법’은 1994년 종단 개혁으로 제정된 획기적인 안이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것을 전면 개정했다. 운영위원들의 자격을 구체화하고 역할을 심의가 아닌 의결로 격상해 실재적인 역할을 담당토록 했다.

○ 육군훈련소 군법당 신축

2012년 5월 육군훈련소 군법당 호국영무사 신축 법당이 완공됐다.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건평 5281㎡(1597평)의 규모로 건립됐으며 수용 인원이 3500여명에 이른다. 총 불사금 125억여원이 투입됐다. 군 법당 중에서 최대 규모이며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한다. 이 법당을 완공하기까지는 군종교구를 비롯해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나섰다. 육군훈련소 기존 법당은 좁고 낡아서 밀려드는 훈련병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해 겨울에는 찬 바람을 맞으며 외부에서 서서 법회를 보고 여름에는 피아법 속에 견뎌야 했다.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국가지정문화재의 70%가 불교문화재이지만 이에 대한 관리·보존사업은 열악한 수준이며 우리 입장에서는 성보인 문화재를 직접 수리할 능력이 없었다. 처리할 공간도 기술도 장비도 인력도 없이 정부에 의존하거나 속수무책 지켜보아야하는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다. 비정치 문화재 뿐만아니라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역시 제대로 된 관리를 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다. 나아가 모든 성보문화재에 대한 보존환경 연구 및 과학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예방적인 보존 및 복원이 필요했다. 이에 불교문화유산을 진단 보존 복원 연구 등의 전승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훼손되거나 관리가 필요한 성보문화재들을 직접 보수·복원할 수 있는 ‘중합병원’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였다. 2012년 조계종과 문화재청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 2017년 8월24일 역사적인 기공식을 했다. 보존센터는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3000㎡ 규모다.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의 3분의 2 크기로, 민간 보존처리 시설 가운데 가장 크다.

○ 한국불교 세계에 알리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을 건립하고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및 국제불교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한국불교 세계화에 앞장섰다. 또한 한국불교세계화를 위해 뉴욕, 파리, 시드니 등에 총무원장 스님이 직접 나가 한국불교 우수성과 전통을 알렸다. 또한 근대한국불교 문헌을 영어로 번역 출판하는 등 세계에 한국불교를 알리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 민족문화유산 보존 나서다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있어서도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다. 전통사찰 방제사업을 통해 2012년부터 전국 사찰의 화재와 도난 예방을 위한 방제사업을 진행해 2017년 총 892개소의 방제시설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1년 까지 전국 대부분의 전통사찰의 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2012년 연등회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되었고 2013년 삼화사와 진관사 국행 수륙제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26호로 지정되어 불교문화의 우수성과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보존해 나가기 시작했다.

성보 문화재 환수에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 2014년 문화재청, 경찰청과 함께 ‘불교문화재 도난 예방 및 회수를 위한 협약’을 회수하고 31건 48점의 도난 성보문화재를 회수했으며 2015년부터는 송광사 오불도를 비롯한 해외에 반출된 우리 성보문화재 6점을 환수에 불보살의 가피가 우리 사부대중의 외호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립중앙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던 사리 129과를 이운해 신앙의 대상으로 옮기는 모실 수 있도록 앞장섰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